

 <b>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b>	<b>보 도 자 료</b>			
보 도 일 시	‘17. 8.8(화) 15:30	배 포 일 시	‘17. 8. 7.(월)	
담 당 부 장	이도영 부이사관 (02-397-1321)	담 당 자	진수웅 서기관 (02-397-1305)	

## 일자리위원회,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책을 일자리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 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 일자리중심 기관평가,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의결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가 8월 8일 1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되었다.

\*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별도첨부), ②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별도첨부), ③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 첫 번째 의결안건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일자리 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①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이상 R&D, 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249→1,000개 내외) 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 또한,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여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지도록 하였다.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부문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이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된다.
- ④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 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유도한다.
  - 특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탑” 포상도 신설한다.

- ⑤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모든 부처 공통 및 14개 부처별 이행과제도 함께 확정(첨부 1)하였다.

## ②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 두 번째 안건인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신중년이 주로 활동하는 경로별\*\* 실태점검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다.

\* 신중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

\*\* ①재취업, ②창업, ③귀농.귀어.귀촌, ④사회공헌

- 우선, 재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신중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창업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생계형 창업 대신, 특화·비생계형 창업과 세대융합형 창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유형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등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경로로 활용하도록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 아울러,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 ③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 세 번째 안건인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는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 첨부1

## 일자리중심체계 부처별 이행과제

부 처	이행 과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li> <li>▶ 위탁·민자·공모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반영</li> <li>▶ 특허·허가, 인가, 개별 사업 지원시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우대</li> <li>▶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맞춤형 홍보 확산</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편성 및 세제지원제도 재설계</li> <li>▶ 고용영향평가와 예산 연계</li> <li>▶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li> <li>▶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 인력관리 제도 개선</li> </ul>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지원기업 선정시 일자리 지표 비중 확대</li> </ul>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자체 조직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또는 신설</li> <li>▶ 지자체 일자리 예산 확대 및 지방세 제도 개편</li> <li>▶ 지자체 합동평가 일자리 창출평가 강화</li> <li>▶ 지방공기업 일자리 중심 경영평가 체계 구축</li> <li>▶ 일자리에 기여한 기업인, 국민,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우수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투자유치제도 개편</li> <li>▶ 무역금융·보증에 일자리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 신규 도입</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li> <li>▶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li> <li>▶ '고용탑'(신설) 수여 및 인센티브 부여</li> </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택지내 업무·상업 용도의 토지 등 분양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li> </ul>
국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업무평가에 일자리 평가 대폭 강화</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 확대 및 신청기준 완화 등</li> <li>▶ 국책은행 경영평가지 일자리 기업 지원 실적 추가</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단계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li> <li>▶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자리 우수기업 위주로 개편</li> </ul>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관련 입법 신속 추진 지원</li> </ul>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li> </ul>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관세 관련 세정 지원</li> </ul>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 기반 일자리 정책·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li> </ul>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입찰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li> <li>▶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 등</li> </ul>

## **첨부2**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핵심과제 [신규 위주]

### **1 고용영향평가 강화**

- 예산사업 평가대상 확대(249 → 1,000개 내외) 및 예산연계 강화,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신규 도입
-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개선

###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 유사·중복사업 점검, 직접일자리사업 브랜드화, 고용서비스기관의 표준품질 관리기준 마련 등

### **3 정부·지자체 일자리 전담조직 지정 또는 신설**

- 일자리 전담부서에 일자리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전담인력 보강

### **4 고용탑 신설**

- 전년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고용탑'을 수여하고 근로감독, 금융, 마케팅 등 인센티브 부여

### **5 일자리 중심 기관평가**

-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 강화

### **6 금융·세정지원 강화**

- 무역금융·보증 등 일자리 우수기업 금융상품 도입 및 지원액 확대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관세조사 등 면제

### **7 조달·공공계약제도 개선**

- 공공부문 입찰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입찰시 감점 부여

### **8 타당성 심사제도 개편**

- 재정사업·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시 일자리 지표 배점 강화 또는 신설

### **9 지자체 일자리예산 확대**

- 지특회계 및 보통교부세 배분시 일자리 확충 노력 및 성과를 반영

### **10 위탁·민자·공모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반영**

- 일자리 창출, 질 제고에 대한 실적·계획을 평가에 반영

### 첨부3

## 이용섭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새정부는 출범후 지난 90여 일 동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 다행히도 기업들과 노동계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거시적으로도 고용률이 개선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정부는 지금 일자리 고속도로(인프라) 건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금년 중에 일자리 고속도로가 완성되어 내년부터 일자리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일자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 ◆ 따라서 오늘 2차 회의 안건은 일자리 고속도로, 소위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기관평가를 개편하는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이 되겠습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주요 일자리 인프라들을 말씀드리면,

- ① <일자리추진체계 강화>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정부 각 부처와 17개 광역시·도별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 ② <정부지원체계 개편>
  -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 그리고 주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폭 강화된 고용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우대 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입국’이라는 인식하에 수출탑을 수여해 격려해왔던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고용탑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③ <일자리 중심 평가> 국정이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정부 기관 업무평가,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추가하겠습니다.

◆ 정부가 이처럼 우리 경제 패러다임과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나 기업에 대한 부탁만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을 보면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일자리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고,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용절약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내 고용 사정을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에코붐 세대들(91-96년생)이 고용 시장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청년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일자리 질을 높이는 문제는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일자리 보물단지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여건도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는 기존의 경제운용 틀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이런 점에서 우리 **일자리위원회의 역할**도 각 부처와 기관들의 일자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선도적 혁신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4

##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개요

□ 일시 : '17.8.8.(화) 14시~15시30분

□ 장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8층 813호)

□ 참석대상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당연직 위원, 15명)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자리수석,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위촉직 위원, 13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조돈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박병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문유진,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명혜, 농협경제지주 대표 김원석, 벤처기업협회 회장 안건준, 경기도 수원시장 염태영, 이스타 항공그룹 회장 이상직

○ (BH)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

○ (일자리기획단) 장신철 부단장, 한훈 총괄기획관 등

□ 의결안건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 보고 : 일자리수석(총괄), 기획재정부(공공기관평가),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재정일자리사업 혁신 방안), 행정안전부(지자체합동평가, 일자리 전담조직), 국무조정실(정부업무 평가)

②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고용부)

③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일자리위)

**첨부5****언론 브리핑 계획 (2차 회의 후)**

□ 일시·장소 : 2017.8.8.(화)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이후(16시 잠정),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KT west 빌딩 12층)

□ 참석자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일자리기획단 단장
- 기재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 사 회 : 일자리기획단 부단장

□ 진행 순서(총 30분)

- 16:00 ~ 16:20 (20분) 회의 결과 발표(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16:20 ~ 16:30 (10분) 기자단 질의·응답

< 좌석 배치도 >

일자리기획단 단장	고용노동부 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	-------------	--------------	----------------	-------------	-------------

(사회)  
일자리기획단  
부단장

기 자 석